



## 미디어와 국적

서경주 중재위원(서울제8중재부)

구성원들에게 가치나 윤리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최상의 공동체는? 대부분이 국가라고 답할 것이다. 유럽연합이라는 국가연합체가 있지만 각자 주권을 가진 개별국가의 느슨한 연합체라는 점에서 국가를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류공동체 혹은 지구공동체 역시 하나의 이상일 뿐, 공동선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현실적 강제력은 최종적으로 국가를 통해 행사된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 그리고 국가가 강제하는 가치와 윤리규범, 제도와 절차는 과연 유용하고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뉴스미디어도 지리적으로 어느 국가에 주소를 둔 특정 공간을 지배하는 가치규범과 제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가? 바하마나 케이먼 군도와 같이 국가가 조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택스-헤이븐이 있듯이 오로지 편견 없는 진실과 인류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기사를 쓰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미디어-헤이븐은 없을까?

21세기에 들어 지배적인 미디어가 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지리적 공간개념은 무의미해졌으며 국가의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과 범위도 제한적이게 되었다. 계속 입법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 매체들은 이 담장의 허술한 곳을 뛰어넘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 최근 SNS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와 e커머스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은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뉴스미디어들은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테두리 안에 적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미디어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이라는 국적을 지니며 한국의 윤리규범과 가치, 역사,

한국인의 정서, 국가정체성 등에 묶여 있다. 한국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매체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뉴스 매체가 특정 시공간에서 이뤄지는 구독이라는 구체적 행위에 존재기반을 두고 있는 한, 그 매체가 속한 커뮤니티 내 다수 수용자들이 믿고 따르는 가치와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국적이 없는 미디어를 경험해오고 있다. 오래전 공해상에서 라디오를 송출한 해적 방송 이야기는 아니다.



## 무국적 혹은 탈국적 미디어

익명의 취재원들이나 고발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금기와 성역 없이 폭로성 기사를 게재하는 다큐먼트 아카이브 위키리크스는 아이슬란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소재지조차 모호하다. 우편물 수취 주소는 오스트레일리아 멜번 대학의 사서함으로 되어 있고 취재기자들을 위해 국가번호가 44(영국)인 전화번호를 하나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연락처는 모두 이메일 주소이다.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져 원격 클라우드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다. 공개된 이메일 주소는 모두 '.ORG'로 끝나 IP를 추적하지 않는 한 소재를 확인할 수 없지만 스스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창립자인 줄리안 어샌지는 호주 국적이지만 국적과는 거의 무관하게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왔다. 오히려 자국인 호주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어샌지가 시사주간 타임의 “올해의 인물”과 프랑스 르 몽드지의 “독자가 뽑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던 2010년 당시 줄리아 길라드 호주 수상은 어샌지의 활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어샌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기록, 이라크 전쟁 관련 기록,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혐의자들에 대한 잔혹행위에 대한 기록 등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어샌지와 위키리크스는 반미, 반이스라엘, 친러시아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제보된 자료들을 자의적으로 선별·편집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익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었던 기존 뉴스미디어들과는 달리 자유와 인권, 정의 같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공동선을 위해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어샌지는 2008년 영



# WikiLeaks

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수여하는 뉴미디어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언론 분야에서 수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였으며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위키리크스는 시작부터 국적을 표방하지 않았다. 군이 비유하자면 카리브해의 해적 같은 존재다. 해적이 금품과 인질을 노린다면 위키리크스가 목표로 삼는 것은 기존 언론들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강대국의 비밀, 거대기업의 비밀이다. 위키리크스가 어떤 특정 국가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 기존 미디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묵인해온 금기와 성역을 깨뜨릴 수 없었을 것이다. 설립자인 어샌지의 범죄혐의와 일탈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위키리크스가 보여준 무국적 혹은 탈국적 미디어로서의 장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의 하나로 급부상한 유튜브 역시 아예 영상물을 차단하는 것 말고는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그만큼 유튜브는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 물론 소유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고 운영주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브루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지만 유튜브에 정보를 올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수용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식하지 않는다. 미국의 국가 이익이 여기에 투입할 여지도 별로 없다. 뉴스를 실어 나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들 역시 초국적을 넘어 탈국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국익이라는 가치를 존중하고 옹호하지만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에게 소득이 되고 나의 내핍이 다른 사람의 손실로 이어지는 이치를 생각한다면 한 나라의 국익이 반드시 소속된 구성원들, 즉 국민들의 이익이나 인류보편적인 공동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더욱이 미디어의 영역에서, 국가라는 존재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관점의 수용을 통해 객관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소망을 좌절시키는 휘방꾼 노릇을 하는 경우는 차고 넘친다. 국적이 선명한 매체들은 무국적 혹은 탈국적 미디어들에 비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간섭과 방해를 받는다. 최근에 벌어진 WSJ의 칼럼 제목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화근이 된 제목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월 3일, WSJ 오피니언 면에 유명 인문학 대학인 바드 칼리지의 석좌교수 월터 러셀 미드 교수가 칼럼을 기고하였고 여기에 편집진은 중국을 “아시아의 진짜 환자(the real sick man of Asia)”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저자가 기고한 원문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편집자들이 원문의 내용을 집약하여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것이다.<sup>1)</sup>

칼럼의 요지는 우한시와 중앙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이라는 거대국가(Chinese juggernaut)가 미숙하고 경직된 거버넌스로 인해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온건보수성향의 논객답게 관점은 균형을 잃지 않고 언사는 점잖았다. 필자의 눈으로 볼 때 중국정부가 발끈할 대목이 없었다. 그런데 제목이 문제가 되었다.

뉴스미디어에서 온라인구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제목은 훨씬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목이 이른바 클릭베이트, 즉 온라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미끼로 쓰이는 것이다.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서라도 구독자를 늘리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은 영국 가디언의 편집국장인 캐서린 비너의 말처럼 “정확성과 진실성을 희생물로 삼고 있다.” 퀄리티 페이퍼의 전통을 자랑하는 WSJ에서조차 호주 출신 미디어재벌인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에 인수된 이후 이런 일은 드물지 않다. 참고로 필자가 속한 언론중재위원회 서울8중재부에도 내용에 비해 훨씬 자극적인 제목의 정정을 요구해온 신청이 여러 건 있었다.

1) 정치적 정당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차별적 용어 사용이 금지시되는 상황에서 'sick person'이 아니라 'sick ma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국가가 환자라는 이 은유적 수사는 유럽이 크림전쟁으로 치닫던 1853년 러시아제국의 차르 니콜라스 1세가 제국의 남진을 가로막던 오스만 터키를 '환자(sick man)'라고 표현한데서 기인한다. 영국 수상을 지낸 존 러셀이 니콜라스 1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명해졌고 이후 하나의 클리셰가 되었다.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1차 대전 이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이 환자로 불렸고 19세기 말 기울어가는 중국 역시 아시아의 환자라는 오명을 얻었다.



“중국이 환자”라는 제목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파죽지세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나 중국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아편전쟁 이전, 강희·옹정·건륭 치세의 청나라 전성기를 모델로 삼아 일대일로의 중국몽을 펼치는 중국의 시진핑으로서는 19세기 후반 기울어가던 중국에 대한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용어였다.

## 반응과 보복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지만 WSJ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급기야 중국정부는 WSJ의 베이징 주재 기자 3명(부지국장 조슈 킨, 차오 덩, 필립 웬)의 체류 자격을 박탈했다. 경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WSJ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 철저한 조사,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감스럽게도 WSJ이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뿐이었다. 중국 인민들은 ‘인종 차별적인 언사(racially discriminatory languages)’를 사용하고 중국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매체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 명의 외신기자들을 한꺼번에 추방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발행인 윌리엄 루이스는 WSJ은 뉴스와 오피니언은 전혀 별개로 추방된 기자들은 이 칼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하지만 중국국민들에게 혼란과 염려를 야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편집국장인 맷 머레이는 “오직 진실을 위해 불편부당하고 두려움없이 중국 관련 기사를 계속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상적으로 보면 사태는 단순하다. 비상 시기에 WSJ이 중국을 자극하는 칼럼 제목을 달았고 중국은 이에 대한 항의와 응징으로 베이징 주재 특파원 세 명을 추방한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간단치 않다. 중국이 특파원 추방을 발표하기 하루 전 미국 국무부는 워싱턴에 주재하는 신화통신, CGTN, Radio China, China Daily, 인민일보 등 다섯 개 언론사 지국을 해외공관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속 인원과 자산을 공개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베이징 주재 WSJ 특파원의 추방이 이러한 미국무부 조치에 대한 치고받기 식 대응이라는 주장의 근거이다. 중국은 이번 특파원 추방을 통해 ‘미국 언론도 국익을 추구하는 정부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하는 것과 아울러 국민 관심사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미숙하고 허술한 초기대응에서 미국이 중국에 갖는 인종적 편견이라는 휘발성 높은 주제로 돌리려고 했다. 칼럼의 어디에도 인종적인 표현이 없음에도 경황 대변인은 “인종 차별적 언사”라는 표현을 썼다.

## 충돌과 순치(馴致)

이번 특파원 추방사건은 이례적으로 WSJ 내부충돌을 가져왔다. WSJ은 뉴스와 오피니언의 편집 시스템을 따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피니언 지면을 담당하는 기자와 논설위원들 그리고 외부기고가들은 편집국의 뉴스보도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편집국의 기자들과 게이트키퍼들 역시 논설위원이나 외부기고자들의 사설이나 칼럼에 관여할 수 없다.

중국 정부가 세 명의 특파원을 추방한다고 발표한 다음날, 베이징 특파원을 비롯해 편집국에 근무하는 취재기자들이 연명으로 경영진에 서한을 보내 간부들과 오피니언 부서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서한에는 모두 53명의 기자들이 서명했다. 이 서한에서 기자들은 제목이 ‘경멸적(derogatory)’이라고 규정하고 제목을 수정하고 독자, 필자, 동료기자들 그리고 이 제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중국에 주재하는 기자들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1980년에 개설된 WSJ의 베이징 지국에서는 특파원을 포함해서 직원 약 40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 중국 정부의 압박은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족 부양과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목을 수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국 정부는 특파원의 주재 허가를 서방의 미디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



단으로 삼아왔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군사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은 외국 뉴스 매체들에게 중요한 뉴스 취재원이자 시장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정치·경제·문화를 망라하여 중국을 취재하지 않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된 매체 대접을 받기가 어렵다. 중국에 관한 뉴스 가치가 나날이 커지면서 베이징과 상하이에는 수많은 외신기자들이 주재하며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역설적으로 중국정부가 외국 뉴스 미디어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중국 경제의 성장과 비례해 강화되었다. 중국의 뉴스 가치가 커지면서 외신들의 중국 내 취재 경쟁이 치열해지자 취재하려면 지킬 것은 지키라는 중국당국의 요구가 먹혀들고 있으며 중국 내 언론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3월 2일 중국외신기자클럽은 2019년 한 해 동안 외신기자들의 취재보도 환경을 심층 조사하여 언론자유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이 이렇다. “통제, 제지, 삭제: 추방위협 받는 중국에서의 보도 (Control, Halt, Delete: Reporting in China under threat of expulsion)”.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25개국 출신 114명의 외신기자 클럽 회원들 가운데 중국의 언론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년 연속 단 한 명도 없었다. 응답자의 82%가 취재보도 활동 중에 간섭, 훼방 혹은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70%는 인터뷰를 약속했던 취재원이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취재를 거부하는 일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43%는 자신들의 취재활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감사를 당하고 있어서 취재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그리고 보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수행 취재하던 우리 기자가 중국 경호원에 폭행을 당한 것은 중국으로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다.)

베이징 당국의 압력에 순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정부는 일단 자신들의 뉴스 가치를 무기로 외신들을 순치(馴致)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길들여진 저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으며 중국이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 알리는 것이다.

## 탈국적에서 탈인격 미디어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뉴스 미디어의 국적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위키리스크 같은 무국적 매체를 넘어서 실체를 알 수 없는 무명의 뉴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뉴스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뉴스도 아니다.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기계가 기사를 쓰니 이름이 있을 수 없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텍스트 형태의 내러티브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은 2006년부터 상용화되었다.

경제전문 뉴스 매체인 블룸버그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인 사이보그로 하루 수십 건의 금융 관련 기사를 써낸다. 포브스에서는 버티라는 이름의 AI가 기자들에게 초고를 전송하면 기자들과 편집자들은 그 초고를 다듬어 기사를 완성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6년 브라질 올림픽 보도에 헬리오그래프라는 기사작성 알고리즘을 도입하였다. 이후 1년 동안 헬리오그래프는 850건의 기사를 썼다. 그 밖에도 많은 언론사가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와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스포츠 경기결과를 알고리즘에 맡겨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이제는 알고리즘이 진짜 뉴스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도 지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국적 없는 매체와 인격 없는 저널리스트들에 이끌려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 🤖